

[첨부] 「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」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Q1.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입니다.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지정 기준 10조원으로 상향 (43.9%)
- ②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 (17.1%)
- ③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 (21.9%)
- ④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 (12.2%)
- ⑤ 기타 (4.9%)

Q2.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일부 규제를 1~2년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(상호출자 1년, 채무보증 2년).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모든 규제 3년 유예 (46.3%)
- ② 모든 규제 2년 유예 (22.0%)
- ③ 모든 규제 1년 유예 (4.9%)
- ④ 현행 유지 (14.6%)
- ⑤ 기타 (12.2%)

Q3.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중에서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채무보증 제한 (9.8%)
- ② 계열사간 거래 규제 (56.1%)
- ③ 신규 순환출자·상호출자 금지 (14.6%)
- ④ 이사회 의결 및 공시·공개제도 (7.3%)
- ⑤ 금융·보험사 의결권 제한 (2.4%)
- ⑥ 기타 (9.8%)

Q4.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(징역형의 경우 최대 3년 이하, 형법상 전시공수계약불이행과 같은 수준 / 벌금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하).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

- ① 형사처벌 규정 폐지 (46.3%)
- ②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 (7.3%)
- ③ 징역형 폐지,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 (22.0%)
- ④ 현행 규정 유지 (17.1%)
- ⑤ 기타 (7.3%)

Q5.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 위반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공정거래법에 양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필요하다 (31.7%)
- ② 필요없다 (58.5%)
- ③ 기타 (9.8%)

Q6.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친족 범위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?

- ① 4촌 이내 혈족, 2촌 이내 인척 (31.7%)
- ② 4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(43.9%)
- ③ 현행 유지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(19.5%)
- ④ 기타 (4.9%)

< 끝 >